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해도 ‘상습정체’ 해결 안돼”

## 서울시의회

“市, 재정부담에 교차로 설치거부  
기업 배불리고 교통난 여전할 것”

## 서울시

“생활권단절 해결 등 지역발전 기여”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서남부 지역의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교통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서부간선도로 지하 4차선 터널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시에 4차선 고가도로 설치를 요구했지만 시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 터널의 교통량이 늘어나 정체가 심해지고 통행료 수입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성산대교남단(영등포구 양평동)부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4차선 고속도로인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추가로 4차선의

터널을 신설하는 게 해당 사업의 주 내용이다.

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하루 5만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전용도로인 지상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했다.

당초 지상 4차선 고속도로와 지하 4차선 터널로 계획된 사업을 지상 4차선 일반도로와 지하 4차선 터널로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부간선지하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국토부 요청에 따라 시 재정으로 4차선의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결로 설치를 제의시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상의 고속도로를 신호등이 설치된 일반도로로 변경하면 지하터널의 통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노선 변경으로 PIMAC의 적격성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노선에 엄청난 교통량을 집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8차선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올라온 교통량이 일반도로 4차선과 지하터널 4차선으로 연결돼 새로운 정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위원회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계획 검토 보고’에서 “양천구의 안양천길과 다르게 영등포, 구로, 금천지역은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친환경시설과 단절돼 이용이 불편하다”면서 “서부간선이면도로는 인적이 드물어 야간에 우범지대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서부간선도로가 조성되면 생활권 단절문제를 해소해 지역발전이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서부간선지하고속도로가 설치되면 지상 도로에 신호등을 만들어 생활권 단절이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본 사업은 일부 유휴 공간을 확보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이를 생활권 단절을 도로가 해결해주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타 사업에서 기존 도로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광고

# 한기총 해체 촉구 100개 단체 연대집회

### “한기총은 국가와 세계 종교 망신, 해체해야” ... 27일 광화문에 3만 명 운집

각종 부정부패와 반국가·반사회·반종교적 행위로 신뢰를 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 대해 100개에 달하는 단체가 한 목소리로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총해체촉구세계시민인권연대(사무총장 김신창)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기총 해체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기총해체촉구세계시민인권연대(이하 연대)는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사)부패방지운동법기독교총연합회(회장 오향열), 한기총폐쇄실천목회자연대, 초교과전도사협회, 세계불교정상화(한국대표 해원스님), 여성 및 청년 인권위원회 등 약 100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월 29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한기총의 실체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연대는 ▲한기총이 신사참배와 군사물자 지원 등 친일 행위를 한 장로교에 뿌리를 둔 이적단체인 점 ▲교단을 결집한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금권선거, 세습 등 각종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점 ▲최근 10년간 소속 목회자 1만 2천 명이 살인, 성폭력, 사기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돈벌이를 위한 인권유린 강제개종 사업을 부추긴 집단이란 점 ▲사적 이익을 위해 타 교단 및 종교를 배척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연대는 “한기총은 종교 단체가 아니”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이익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기총의 비정상적 행위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며 해외에서도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곧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종교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기총 문제를 방관하는 대한민국 기독교계와 종교 권력이 된 한기총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위상과 종교



▲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기총 해체 촉구 궐기대회

국내 기독교 대표 자처 권력 키워  
"종교 가장한 정치·이익집단"  
친일행위·강제개종·각종범죄 난무  
"한기총 해체하고 회개해야"

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기총 해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도 한기총이 친일 뿐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등을 지지하며 정치에 적극 개입해온 역사적 사실과 한기총 회장의 금권선거와 목사 자리까지 돈으로 사고파는 현실 등을 비판했다.

특히 한기총으로 대표되는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단이 성장할 경우 이에 대해 온갖 거짓뉴스를 양산해 자의적인 이단 정죄를 함으로써 교계의 분열과 혼란을 자초하고 자신들의 기독교 수호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더욱이 최근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2명의 여성이 사망했음에도 같은 수법의 강제개종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을 알렸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각 단체 대표들은 한기총의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 반사회적 행태들을 신랄하게 질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기총폐쇄실천목회자연대 신영문 목사는 “한기총은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기총의 근간이 된 장로교단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노릇을 했고 쿠데타 정권 시절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을 지지하며 국민 분열과 혼란을 생산한 정치적 이익집단이자 거짓목자”라고 비판했다.

세계불교정상화의 해원 스님은 “한기총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종교 화합을 위한 종교 간 대화의 장까지 휘방하고 있다”며 한기총의 도를 넘는 이기심과 타 종교를 배척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 구현진 부위원장은 경찰청 통계를 들어,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가 개신교 목사라고 지적하며 한기총 등 한국교회를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강제 개종으로 2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한기총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무분별한 이단정죄를 해왔고 그 중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적 강제개종을 일삼아 왔다”며 정부를 향해 강제개종금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연대는 “친일과 이적단체, 범죄 집단 한기총의 행위는 자신들이 이단, 거짓목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한기총 문제를 계속 방관할 경우 한국 교계의 떨어진 신뢰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이라며 “한기총 해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산업 R&D 총력

## 백신·의약 핵심기관 현장간담회

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초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연구개발(R&D)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라남도과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31일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생물·의약산업 업무보고와 연계해 백신·의약핵심기관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전남 생물산업의 2019년 업무계획과 백신산업특구의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836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 등 백신·의약산업 핵심 인프라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전라남도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 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역동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사업인 ▲항암 면역세포·줄기세포 생태계 구축 ▲글로벌 백신 제품화 생산 지원기지 조성 ▲천연물 기반 의약품·향장·기능성 식품 개발 ▲의약·치료·휴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힘쓸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장기적으로는 숲·강, 섬·바다 등 자연 치유공간과 화순전남대병원 등 종합병원, 국내 최대 요양병원 집적단지를 기반으로 ‘암 치료-요양병원-기능성 식품-치유·휴양’을 융합한 의료 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제공한다. 여기에 항노화연구소, 국립치매행복마을 등 관련 서비스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한상오(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소장은 “올해 세포 치료제 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며 “차세대 백신의 핵심인 면역세포 치료산업을 전남에서 선점하도록 R&D, 자문, 기술 지원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

# 광주 북구, 여성친화도시 평가 ‘대통령상’

## 권익 증진·성 평등·돌봄 등 성과

광주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전국 8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2016년 12월 재지정 되면서 여성의 권익 증진은 물론 성 평등, 돌봄 및 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성친



문인 광주 북구청장

화도시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

먼저 북구는 여성친화정책팀 신설과 민관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동력을 확보했으며 성 평등

교육, 양성평등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해 긍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제도를 정착시켰다.

문인 북구청장은 “여성이 행복해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성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